환경부, 환경기초시설 크게 확충

환경부는 내년도 환경예산을 올해보다 37.4% 늘려 녹색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지난 6월 12일 환경부가 마련한 2002년도 환경예산 투자계획에 따르면 수질, 대기, 폐기물관리, 자연자원 보전 등 녹색환경 조성분야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내년도 환경시설 투자규모를 올해보다 37.4% 늘어난 1조8천338억원 수준으로 편성키로 했다.

분야별로는 상수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에 금년보다 44.3% 증가한 4천76억원을 배정, 광역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119개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지방상수도를 확충키로 했으며 상습가뭄지역의 안정적인 수원확보를 위해 지하수 폐공 복구 및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키로 했다.

수질개선을 위한 기초시설 건설에는 3천842억원을 들여 전국 1천360개소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동두천, 구미공단등 7개 공단에 하·폐수처리장을 신설키로 했으며 서울시 하수관거(37㎞)정비, 4대강 수질개선 사업도 확대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키로 하고 내년에 3천912억원의 예산을 확보, 대구 광주 속초등 14개소에 쓰레기매립장을 건설키로 했으며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23개소), 폐기물소각시설(30개소), 비위생매립지(35개소) 건설에도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앞으로 폐기물배출과 관련된 서류가 간소화되고 오니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제77차 위원회를 열고 경제5단체가 건의한 환경 등 6개 분야 48개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규제위, 폐기물배출서류 간소화

앞으로 폐기물배출과 관련된 서류가 간소화되고 오니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제77차 위원회를 열고 경제5단체가 건의한 환경 등 6개 분야 48개 규제개혁과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에서 건의된 과제 가운데 24개를 우선 심의, 20개 과제는 수용하고 3건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분과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사업장의 폐기물 관련 서식 가운데 폐기물처리 실적보고서와 폐기물 정산서를 통합, 간소화하기로 하고 하반기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토록 했다.

또 연간 200톤 이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폐기물 감량화 실적 및 계획보고서 4종을 1종으로 통·폐합, 7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선거리 100㎞ 이상 이동하는 일반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인계서를 간이인계서로 대체하도록 완화하고 오니·광재의 간이인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것은 폐기물처리 증명 전산화작업과 연계해 시행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재활용을 금지토록한 폐수오니에 대한 유·무해성 유무를 검토해 농진청고시를 개정, 오는 200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거 적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2일부터 5월4일까지 전국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만276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의 6.9%인 705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 이 가운데 154개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지난 6월 8일 밝혔다.

조치이행명령이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 사용중지 처분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경고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삼성엔지니어링[28050], 금강종합건설공사, 보성건설 등은 부천시 상동택지개발 지구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포장하지 않은 채 사용하다 부천시에 의해 고발됐으며 S K건설은 여수시 낙포동 한국석유공사 여수추가비축기지건설공사를 하면서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않아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의해 고발됐다.

경기도, 환경기술지원 '환경닥터' 운영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영세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관련 기술을 전수할 '환경닥터'제를 운영한다고 지난 6월 6일 밝혔다.

환경닥터는 환경관리인 37명, 교수 10명, 방지시설업 관계자 3명 등 모두 8개반 50명으로 구성되었다.

환경닥터는 앞으로 도내 12개 시·군의 수질분야 오염물질 배출업소 27개, 대기 분야 배출업소 9개 등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신환경기술 및 정보를 제공한다.

또 해당 업체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자금도 융자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영세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관련 기술을 전수할 '환경닥터'제를 운영한다고 지난 6월 6일 밝혔다. 환경닥터는 앞으로 도내 12개 시·군의 수질분야 오염물질 배출업소 27개, 대기 분야 배출업소 9개 등 3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신환경기술 및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오염 감시에 견공(犬公)나선다

한 기초 자치단체가 개로 하여금 환경 훼손 업체를 탐지·감시하기로 해 신선한 아이디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 서구는 이달 말까지 개 한 마리를 도입, 3개월 동안 적응훈련을 시킨뒤 폐수나 악취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과 탐지에 나서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구는 올해 견공의 '활약상'이 뛰어날 경우, 2004년까지 3마리를 더 확보해 단속에 투입할 계획이다.

구(區)는 그동안 대부분의 업체들이 밤에 몰래 폐수를 무단 방류, 오염 출처를 확인하는 게 여간 어렵지 않은데다,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업체가 문을 열어 주지 않아 업체로부터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지 못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처벌에 어려움이 컸다.

또 일부 무허가 도금공장들은 공장안에 도사견을 길러 공무원들이 접근조차 하지 못해 단속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개는 뛰어난 후각으로 오염출처를 찾아내고, 공장안에 사람이 있는지도 가려내 이들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사견도 능히 물리쳐 악덕 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지역에는 수도권생활쓰레기 매립지 외에 주물·목재공단, 17개의 고농도 폐수처리업체, 400여개의 무허가 공장 등이 난립, 환경이 가장 나쁜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황영권 환경위생과장은 "마약이나 폭발물 탐지에 개를 동원하는 데 착안했다"며"폐수 배출 신고가 들어오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더라도 업체 직원을 현장에서 찾지 못해 처벌하는데 애를 먹었으나 개를 동원하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 종합대책 마련

내년부터는 대구와 부산, 광양만 지역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규제 지역에 포함되고 페인트나 인쇄잉

크에 들어가는 유기용제의 양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최근 암을 유발하고 악취나 오존, 스모그의 발생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줄이기 위해 장단기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며, 대기중에 휘발돼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에틸렌, 스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통칭한다.

환경부는 현재 여천공단이나 수도권 등에서만 실시중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규제를 지난 99년 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부산, 광양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많이 포함되는 페인트나 인쇄잉크에 새로 함량기준을 설정하고 환경친화적인 수성페인트와 분체도료의 사용비율도 크게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휘발유를 탱크의 하부로 주입하도록 유조차의 구조를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단지역 "환경경찰" 떴다

낙동강환경관리청 부산지역 출장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사상구 전용공업지역 등 공단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내년부터는 대구와 부산, 광양만 지역이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규제지역에 포함되고 페인트나 인쇄잉크에 들어가는 유기용제의 양도 제한된다.
환경부는 최근 암을 유발하고 악취나 오존, 스모그의 발생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줄이기 위해 장단기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피부접촉이나 호흡기 흡입을 통해 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대한 지도단속이 한층 강화돼 만성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일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4일 사상구청에 따르면 사상구 감전 · 학장 · 괘법동 등 사상구 전용공업지역에서는 수질 · 대기 배출업체 537곳이 가동중이며 이중 악취발생이 우려되는 업체는 고무 · 플래스틱, 산업용화학, 폐수 · 폐기물처리업체 등 59곳에 달하고 5곳은 악취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돼있다.

또한 전용공업지역 인접 지역에는 13개 대단위 아파트(1만1천219세대)와 주택 1만1천845세대가 주거하고 있어 악취와 매연으로 인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부산환경출장소는 우선 오는 9월까지 악취 배출업체에 대한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정기지도 · 점검을 병행,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업체 명단과 위반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환경오염업소 952개소 적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환경오염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4월 한달간 전국의 9천301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952개 업소(10.2%)를 적발, 의법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가운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허가 없이 시설을 운영한 동진쎄미켐㈜, 동양금속공업사, ㈜한흥, 봉신남동제1공장, 장인가구, ㈜동진산업 등 376개 사업장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부경산업, 삼익환경산업, 서울시장묘사업소, 그린제지, 덕진섬유, 롯데햄 · 롯데우유, 지성실업1공장, 한신섬유 등 288개 사업장은 시설 개선처분 명령 처분과 함께 대부분의 업소에 배출부과금이 부과됐다.

위반내역별로 보면 배출허용기준 초과 291건, 무허가운영 275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39건, 기타 247건 등이다.

지자체로 단속권 이관후 수질오염 단속 급감

경기도 북부지방의 상수원인 임진강의 수질오염 단속권한이 지난해 환경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후 단속건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 소속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의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건수는 지난 97년 4천9건, 98년 5천863건, 99년 7천71건 등이었으나 지도단속권이 경기도로 넘어간 2000년에는 이 지역 단속건수가 3천314건으로 급감했고 올해도 4월말까지 1천59건에 그쳤다.

적발 건수 역시 97년 639건, 98년 632건, 99년 740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2000년에는 570건으로 크게 떨어졌고 올해는 4월말까지 100건에 그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 지도단속 외의 다른 업무도 많아 환경부 만큼 단속에 전념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월드컵 환경관리 종합계획 발표

정부는 월드컵 개최 도시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5천대를 보급하고 총 3조원을 투입해 경기장 주변의 비위생 매립지와 오염하천 등을 정화키로 했다.

>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연탄 사용 감소 등으로 지난 99년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8년전인 91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쓰레기 처리방법도 소각이나 재활용이 많아지면서 쓰레기 매립량은 최근 8년간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또 월드컵 대회에 대비, 지난 5월 25일부터 1개월간 오존오염 저감 예행연습을 실시해 대 기질 개선효과를 분석한다.

환경부는 월드컵 개최 1년을 앞두고 월드컵 환경관리종합대책을 발표, 오는 2002년까지 월드컵 개최 10개 도시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5천대를 보급하며 대회기간 중 차량 2부제 실시, 자동차 공회전 금지 등 대기질 개선대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또 올해와 내년에 총 2조9천909억원을 투자, 난지도 매립장 등 경기장 주변 비위생 매립지와 오염하천을 정화하고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며 생태공원 조성과 생명의 나무심기, 옥외간판. 도로표지판 정비 등 미관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 8년전 대비 절반으로 감소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연탄 사용 감소 등으로 지난 99년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8년전인 91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쓰레기 처리방법도 소각이나 재활용이 많아지면서 쓰레기 매립량은 최근 8년간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김광임 연구부장은 최근 서울 산업대학교에서 열린 '쓰레기종량제 성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환경부 자료를 인용,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의 생활쓰레기 발생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4만5천614t으로 98년의 하루 4만4천583t에 비해서는 2.3%가 증가했으나 8년전인 91년의 하루 9만2천246t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환경부, 신축건물 중수도설치 의무

환경부는 오는 9월부터 물절약사업을 대폭 강화하는 수도법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금년도 물절약 목표를 3억톤으로 설정, 종합적인 물절약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18일 지자체별 물수요관리목표 설정, 신축건물 중

수도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개정법률이 오는 9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다각적인 물절약사업을 전개키로 했다.

수도법개정법률에 따라 앞으로 전국 지자체는 물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해 자율적 물절약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개발등 각종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 대형신축건물에는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목욕장, 골프장, 숙박시설과 같이 물을 많이 쓰는 건축물에는 기존건물에도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물절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에 따라 노후관개량, 절수기설치등 다각적인 물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물절약에 대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산업 육성 및 물절약기술개발 등의 지원사업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수도법개정법률에 따라 앞으로 전국 지자체는 물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해 자율적 물절약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개발등 각종 개발사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 대형신축건물에는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목욕장, 골프장, 숙박시설과 같이 물을 많이 쓰는 건축물에는 기존건물에도 절수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분야 사이버컨설팅 인기

환경관리공단은 지난 3월 시작한 환경분야 사이버컨설팅이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사이버컨설팅은 각 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시설 설치와 운영, 환경경영, 환경사업지원, 환경측정, 분석 등 18개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산·학·연 및 환경관리공단의 전문가들이 컨설턴트로 참여하고 있다.

환경관리공단은 지금까지 총 41건의 컨설팅이 이루어졌으며 조사결과 이용자 대다수(90.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내년부터는 컨설팅 분야를 23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다이옥신배출 무방비

환경호르몬 물질인 다이옥신이 민간 폐기물처리 업체에 의해 무방비로 배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낙동강환경관리청을 통해 시간당 4t 이상을 처리하는 이 지역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의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인 20ng(1ng은 10억분의 1g)을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6월 18일 밝혔다.

창원의 폐기물 소각업체인 S산업의 경우 지난 2월 두차례 배출농도를 분석한 결과 1회 71.726ng, 2회 120.832ng, 3회 143.662ng으로 3-7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산의 H산업의 경우도 지난 3월 19일 조사한 다이옥신 배출측정 결과 1차 23.9 49ng, 2차 30.545ng, 3차 31.010ng 등 모두 배출허용 기준치인 20ng을 초과했다.

이처럼 이들 업체의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웃돌고 있지만 내년말까지 감독기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기준치를 지키도록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 OECD국중 CO_2배출 증가율 최고

우리나라가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지난 80년 이후 1인당 이산화탄소(CO_2)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 6월 1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OECD 환경각료회담에 맞춰 '10대 핵심환경지표'를 발표, 한국은 지난 98년의 1인당 이산화탄 소배출량이 지난 80년에 비해 144%나 증가, 증가율이 회

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117%의 증가율을 보인 포르투갈이며 터키, 그리스, 뉴질랜드 등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캐나다 등 17개국은 오히려 배출량이 줄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은 225%로 2위 국가인 포르투갈(109%)의 두 배나 됐다.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개발위주의 산업구조 하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고효율 에너지기술 개발을 소홀히 한 탓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첫 풍력 수질개선장치 등장

경기도 수원시 광교저수지에 국내 최초로 바람을 이용한 '풍력 수질개선 장치'가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장치는 바람으로 발생된 회전력을 이용, 저수지에 발생한 남조류와 용존산소가 포화된 저수지의 표면수를 강제로 심층으로 보내 남조류(藍藻類)를 없애는 한편 저수지 심층수의 용존산소량을 늘려 호기성 미생물에 의한 자정능력을 향상시켜준다.

또 저수지 심층수를 밀어내 심층수와 표면수의 수소이온농도(PH)를 변화시켜 남조류가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 남조류 발생을 억제한다.

대체연료인 오리멀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오는 2007년 건립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14일 2007년 6월과 2008년 3월에 각각 완공되는 군장화력발전소 1,2호 기의 사용연료로 오리멀전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효율이 높은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유를 사용할 때보다도 엄격한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직경 7m의 풍차는 직경 30㎝의 스크루를 돌려 1회전에 220ℓ의 물을 강제로 밀어내는 이 장치는 초기 설치비를 제외하면 자연에너지인 바람을 이용함으로써 유지 관리비가 저렴한 친환경적인 획기적 수질개선 장치이다.

대체연료 오리멀전 사용 발전소 2007년 건립

대체연료인 오리멀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오는 2007년 건립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14일 2007년 6월과 2008년 3월에 각각 완공되는 군장화력발전소 1,2호 기의 사용연료로 오리멀전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효율이 높은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유를 사용할 때보다도 엄격한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오리멀전은 베네수엘라 오리노코강 연안에 매장돼 있는 천연 역청에 물과 계면활성제를 섞어서 만드는 대체연료로 중유와 성분이 비슷하고 열량대비 가격이 낮아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자원부가 최근 오리멀전을 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도를 평가해 달라는 협의 요청을 해왔다면서 고효율 에너지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모든 측정지점에서 아황산가스(SO_2)나 이산화질소(NO_2), 미세먼지(PM-10) 등의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발전소가 들어설 군장의 국가산업기지는 경유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 지역으로 군장발전소는 SO_2 50ppm, $NO_2$50ppm, 미세먼지 10㎎/㎥ 등 경유 사용시보다 엄격한 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리멀전 사용을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